

과세는 세 번 미뤄졌고 얼마에 샀는지는 각자 증명한다

가상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의 시행일 연혁과 산 값 규정을 법령 원문과 기관 자료로 따라간다

가상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겼다. 처음 정한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다. 세 차례 미뤄져 지금 정해진 날은 2027년 1월 1일이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다. 시가총액은 87.2조원이다.

세금은 판 값에서 산 값을 뺀 금액에 붙는다. 산 값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의 절반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2025년 하반기에만 107.3조원이 거래소 밖으로 나갔다. 그 가운데 90.0조원이 해외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갔다. 밖으로 나간 자산을 얼마에 샀는지는 어디에 남는가.

연구소는 이 제도가 세금을 매기는 시점만 미웠다고 본다. 세금을 매길 근거가 되는 기록을 모으는 시점은 함께 앞당기지 않았다. 시행 첫해에 세금을 가르는 것은 얼마를 벌었는지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다.

발행일

2026년 8월 30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분량

본문본문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세금, 신고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가상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에 세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붙는가. 그 계산을 위해 내가 지금 갖춰 둘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냈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 1월 1일로 세 번 미뤄졌다. 뒤의 두 번은 주식·펀드에 매기려던 세금과 함께 처리됐다. 826만명이 1백만원 미만을 갖고 있다. 세율은 20%, 한 해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매긴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제도는 없다. 산 값은 사람별로 평균을 내 계산하는데, 거래소는 자기 회사 거래만 알아 이 계산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의 50%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거래소가 과세당국에 거래자료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2027년 거래분부터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가입한 국내외 거래소마다 거래내역과 입출금내역을 지금 파일로 내려받는다.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으므로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확인한다. 쓴 지갑 주소와 옮긴 날짜, 수량을 한 곳에 적어 둔다. 2026년 12월 31일에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화면을 저장해 둔다. 그날의 시가가 산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해외 거래소 계좌 잔액이 월말에 5억원을 넘은 달이 있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한다.

한눈에

미뤄진 것은 소득세 하나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해외 계좌 신고 의무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법을 고치 공포한 날과 그 법이 효력을 갖는 날은 다르다. 두 날짜를 나눠 적었다.
- '이용자'로 적힌 값은 사람 수가 아니라 계정 수다. 한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두면 중복해서 세어진다.
- 세금을 계산해 보인 곳은 모두 이 보고서가 직접 계산한 값이다. 계산식을 각주에 적었다.
-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통과를 전제로 쓰지 않았다.
-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만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차례

1장	미룬 것은 세금이고 쌓인 것은 거래다	4
2장	세 번 미뤄져 2027년 1월 1일에 서 있다	6
3장	시점은 미뤘고 기록은 미루지 않았다	9
4장	50%가 세금을 얼마나 바꾸나	12
5장	미뤄진 것은 소득세 하나다	14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17
부록 가	용어 풀이	19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19

미룬 것은 세금이고 쌓인 것은 거래다

얼마나 많은 계정에서, 얼마나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인가.

1,113만개

국내 거래소의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 수

2025년 12월 31일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

87.2조원

국내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2025년 12월 31일 · 같은 자료

5.4조원

하루 평균 거래 규모

2025년 하반기 · 같은 자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반년마다 가상자산사업자 실태를 조사한다. 2026년 3월 발표본은 27개 사업자를 본 결과다.¹

2025년 12월 31일 기준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다. 여섯 달 전보다 36만개 늘었다.¹

거래소에 맡겨 둔 원화는 8.1조원으로 31% 늘었다.¹ 계정 하나당 약 73만원이다.²

시가총액은 87.2조원으로 8% 줄었고, 하루 평균 거래는 5.4조원으로 15% 줄었다.¹

세금을 매기는 날은 세 번 미뤄졌다. 그동안 거래는 멈추지 않았다. 미룬 5년치 거래 기록이 첫 신고의 근거가 된다.

거래 가능 이용자

실명확인 계좌를 갖추고 거래할 수 있는 상태의 계정을 쓴 값이다. 사람 수가 아니라 계정 수다.

거래소 밖으로 나간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크다

2025년 하반기에 거래소 밖으로 나간 금액은 107.3조원이다. 시가총액 87.2조원의 1.23배다.²

그 가운데 90.0조원이 해외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갔다. 밖으로 나간 금액의 83.9%다.²

밖으로 나간 자산의 기록은 그 거래소에 남지 않는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질문은 하나다. 가상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에 세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붙는가. 그 계산을 위해 내가 지금 갖춰 둘 것은 무엇인가.

2026_32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를, 2026_62호가 해외 주식에 붙는 세금을 다뤘다. 이 편은 세금 하나만 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내가 계정을 만든 거래소가 몇 곳인지 세어 목록으로 적는다.

확인하는 곳 · 각 거래소 웹의 로그인 화면과, 실명확인 계좌를 연 은행의 거래내역

2 거래소 밖 개인지갑으로 옮긴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의 입출금내역 화면, 출금 주소가 남아 있다

·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 거래소만 쓰고 한 번도 출금한 적이 없으면 지금 급히 정리할 것은 없다. 그 거래소의 내역이 곧 전부다.

<표 1> 거래는 줄었는데 말긴 돈과 밖으로 나간 금액은 늘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주요 값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증감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 수	1,077만개	1,113만개	+36만개
원화예치금	6.2조원	8.1조원	+1.9조원
시가총액	95.1조원	87.2조원	-7.9조원
하루 평균 거래규모	6.4조원	5.4조원	-1.0조원
거래소 밖으로 나간 금액	101.6조원	107.3조원	+5.7조원
해외사업자·개인지갑 이전액	78.9조원	90.0조원	+11.1조원
1백만원 미만 보유	804만명	826만명	+22만명

주: 조사 대상 사업자는 상반기 25곳, 하반기 27곳으로 다르다. 계정 수와 보유자 수는 단위가 달라 견주지 않았다. 해외사업자·개인지갑 이전액은 원문에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개인지갑) 적용대상 이전 금액」으로 적힌 항목이다. 두 이전액의 증감은 원문 두 값의 차다.¹⁾
 자료: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6년 3월 25일 배포. 상반기 값은 같은 자료에 실린 비교값.

세 번 미뤄져 2027년 1월 1일에 서 있다

연혁과 계산 방법만 적는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3장에서 다룬다.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날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0615호

세 차례

시행일이 미뤄진 횟수
2021·2022·2024년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50만원

한 해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 세율은
20%다
소득세법·2027년 1월 1일 시행

2020년에 만들고 세 번 미뤘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넣었다. 기타소득으로 묶어 2022년부터 매긴다는 내용이다.³

2020년 12월 29일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됐다. 처음 정한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다.⁴

2021년 12월 8일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1차 유예로 적었다.⁵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이 됐다. 주식·펀드 소득 과세의 2년 유예와 함께 처리됐다.⁶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이 됐다. 같은 법률이 주식·펀드 소득에 매기려던 세금을 없앴다.^{7,8}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는 다시 미루는 내용이 없다.⁹

뒤의 두 번은 주식·펀드에 매기려던 세금과 함께 처리됐다. 주식 쪽 세금은 없어졌고 가상자산 쪽만 남았다.

기타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여기에 들어가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표 2> 시행일은 다섯 해 동안 세 번 옮겨졌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규정의 연도별 경과 (2020년~2026년 8월)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정해진 시행일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과세 신설안이 들어갔다	2022년부터 시행(정부안)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 공포, 기타소득에 새로 넣었다	2022년 1월 1일
2021년 12월 8일	1차 유예	2023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2차 유예, 주식·펀드 소득 과세 유예와 함께 처리	2025년 1월 1일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정해진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3차 유예. 같은 법률이 주식·펀드 과세를 폐지	2027년 1월 1일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내용이 없다	2027년 1월 1일 유지

주: 2026년 8월 29일 기준 소득세법 개정문 목록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가상자산 관련 개정이 없다.⁹

자료: 소득세법 개정문과 연혁,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2024년 10월)과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3년 1월)을 정리.

정해진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해진 것은 셋이다. 시행일과 세율, 공제액이 법에 적혀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026년 4월 2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8년 5월 신고부터 받도록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다.¹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2026년 5월 7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예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이 깨진다는 이유를 들었다.¹¹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셋이다. 첫째는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받은 자산의 과세 기준이다.¹²

둘째는 국세청 고시다. 2026년 8월 29일까지 공개됐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는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 세 건이다. 폐지만 한 건과 유예안 두 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¹³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¹⁴

받은 금액에서 산 값과 수수료를 빼고, 거기서 25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20%를 곱한다.¹⁵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더 붙어 합계 22%가 된다.¹⁶

한 해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세금은 165만원이다.¹⁷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스스로 한다.¹⁸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한다. 다른 기타소득이나 다른 투자에서 난 손실과 합쳐 빼는 것도 안 된다.¹⁸

<표 3> 세율과 공제는 해외 주식과 같고, 산 값을 관리하는 주체는 다르다

가상자산·해외 주식·국내 상장주식의 과세 방식 비교 (2027년 1월 1일 이후 기준)

항목	가상자산	해외 주식	국내 상장주식
소득 구분	기타소득	양도소득	대주주 아니면 없음
한 해 배 주는 금액	250만원	250만원	—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손실 이월공제	없음	없음	—
산 값 관리	본인이 여러 거래소를 합산	증권사가 계좌별로 관리	—
첫 신고	2028년 5월	이미 시행 중	—

주: 1) 해외 주식의 기본공제 250만원은 소득세법 조문으로 확인했다. 국세청 신고안내 적자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다.¹⁹

2) 지방소득세를 더한 22%는 소득세법의 20%와 지방세법의 1천분의 20을 합한 값이다.¹⁸

자료: 소득세법 조문과 국회예산정책처 「가상자산 과세상 행정 및 개선방안 연구」(2026년 8월)를 정리.

산 값을 정하는 규칙은 세 겹이다

법은 실제로 산 값과 부대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한다.²⁰

첫째 겹은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자산이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로 산 값 가운데 큰 금액을 산 값으로 본다.²¹

둘째 겹은 시행 뒤에 산 자산이다. 거래소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평균 단가를 내 계산한다.²²

셋째 겹은 산 값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얻어 증명서류가 없는 자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판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²³

이 장에서 확인할 것

① 내가 한 해에 남긴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지 어떻게 본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 앱의 수익률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판 거래의 판 값과 산 값

- 2 2027년 1월 1일 전에 산 자산과 그 뒤에 산 자산을 나눠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거래소의 거래내역 파일. 두 무리는 산 값을 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한 해 이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다.
 손실만 났다면 신고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

<표 4> 언제 샀느냐와 증명할 수 있느냐로 산 값이 갈린다

가상자산 소득 계산에서 산 값을 정하는 네 갈래 (모두 2027년 1월 1일 시행)

어떤 경우	산 값을 어떻게 정하나	근거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것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로 산 값 가운데 큰 금액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산 것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시행 뒤에 샀으나 산 값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판 금액의 100분의 50을 비용으로 인정	소득세법 제37조제6항, 시행령 제88조
국내에 살지 않는 사람과 외국 법인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제6항

주: 총평균법은 한 과세기간을 묶어 평균 단가를 한 번 내고, 이동평균법은 살 때마다 평균 단가를 다시 낸다.²⁾

자료: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문·선구대비표를 정리.

3장

시점은 미뤘고 기록은 미루지 않았다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규칙은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100분의 50

산 값을 확인하기 곤란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2027년 1월 1일 시행

107.3조원

거래소 밖으로 나간 금액

2025년 하반기·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90.0조원

그 가운데 해외사업자·개인지갑으로 간 금액

2025년 하반기·같은 자료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유예를 요구한 쪽과 시행을 지키려는 쪽이 갈렸다. 재정경제부는 형평을 이유로 시행을 지키겠다고 밝혔다.¹¹ 국회에는 폐지안 한 건과 유예안 두 건이 나와 있다. 유예안은 시행일을 2029년과 2030년으로 옮기자는 내용이다.¹³

2022년과 2024년의 유예는 주식·펀드 소득에 매기려던 세금과 함께 처리됐다. 2024년에는 그 세금의 폐지와 같은 법률에 담겼다.^{6,7} 주식 쪽 세금은 없어졌고 가상자산 쪽만 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은 이를 입법 논리의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²⁴

규칙이 이 행동을 만들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 등 소득세를 매기는 데 필요한 자료를 내는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과세당국에 들어가는 자료는 2027년 거래분부터다.²⁵ 그런데 산 값은 그 이전 거래에서 정해진다.

2025년 하반기에만 107.3조원이 거래소 밖으로 나갔고 90.0조원이 해외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갔다. 그 자산의 산 값은 국내 거래소 자료에 없다.¹ 평균 단가를 사람별로 계산하라는 규칙도 같은 자리에 닿는다. 거래소는 자기 회사 거래만 안다.²²

여러 거래소를 쓰면 어느 거래소도 그 사람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 줄 수 없다. 계산 책임이 개인에게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은 이 설계의 한계를 적었다. 사업자에게서 거래내역을 받아 검증하는 방식이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²⁶

50%라는 숫자가 만드는 역전

산 값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규칙은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²³ 1,000만원에 팔았고 실제로 200만원에 샀다고 하자. 증명하면 세금은 121만원, 증명하지 못하면 55만원이다. 자료를 못 갖춘 쪽이 66만원 적게 낸다.²⁷

반대 경우도 있다. 실제로 900만원에 샀다면 증명했을 때 낼 세금이 없다. 증명하지 못하면 55만원을 낸다.²⁷ 같은 규칙이 누구에게는 감면이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은 이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적었다.²⁶

세금을 매기는 날은 세 번
미뤘다. 세금을 매길 근거가
되는 기록을 모으는 날은 함께
앞당기지 않았다.

<표 5> 자료를 갖추지 못한 쪽이 세금을 덜 내는 구간이 생긴다

판 금액 1,000만원일 때 산 값 증명 여부에 따른 세금 (이 보고서 계산)

실제로 산 값	증명했을 때 세금	증명 못 했을 때 세금	차이
200만원	121만원	55만원	66만원 적게 냄
500만원	55만원	55만원	같음
700만원	11만원	55만원	44만원 더 냄
900만원	0원	55만원	55만원 더 냄

주: 1)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로 계산했다. 한 해에 이 거래 하나만 있었다고 두었다.²⁷

2) 증명 못 했을 때의 비용은 판 금액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이다. 소득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했다.²⁷

자료: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이 보고서가 계산.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시행일이 미뤄지자 시가를 재는 기준일도 함께 옮겨졌다. 앞선 문언의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었고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이다.²¹

산 값을 계산하는 방법도 바뀌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 시행령이 사람별 총평균법을 쓰도록 정했다. 그 시행일도 2027년 1월 1일이다.²⁸

법인이 가진 가상자산도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총평균법을 쓰도록 바꿨다. 그 시행일도 2027년 1월 1일이다.²⁹ 규칙은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이 문언만 바뀌었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¹⁰ 상속세와 증여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된다.³⁰

법인에 대한 과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이미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운용해 왔다.^{29,31,32} 세금을 매기는 규정은 미뤄졌지만 국가는 이미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다뤄 왔다.

일본은 5%만 인정하고 한국은 50%를 인정한다

일본에도 산 값을 알 수 없을 때 쓰는 규정이 있다. 판 금액의 5%를 산 값으로 본다.³³

규정의 종류는 같고 비율이 다르다. 한국이 인정하는 비율은 일본의 열 배다. 일본은 증명하지 못한 쪽에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³³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5%에서 45%까지 누진세율로 매겨 왔다. 2025년 12월 세제개정대강에는 다른 방향이 담겼다. 등록 거래업자를 거친 자산에 한해 20% 분리과세를 하고, 손실은 3년간 넘겨 빼 주자는 내용이다.³³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내 거래 가운데 산 값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것이 있는지 골라낸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받은 자산, 개인지갑에서 개인지갑으로 옮긴 자산
- 2 그 자산의 판 금액이 실제로 산 값의 두 배를 넘는지 어렵게 본다.
확인하는 곳 - 실 때의 시세. 두 배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표 5에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국내 거래소에서 사서 같은 거래소에서 판 자산은 산 값이 그 거래소 자료에 남는다. 따로 증명할 것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4장

50%가 세금을 얼마나 바꾸나

이 규칙이 누구에게 얼마나 닿는가.

826만명

1백만원 미만을 보유한 사람

2025년 12월 31일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8.1조원

거래소에 맡겨 둔 원화

2025년 12월 31일 - 같은 자료

1,732개

거래소에 올라 있는 가상자산 종목 수

2025년 12월 31일 - 같은 자료

826만명은 백만원도 갖고 있지 않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1백만원 미만을 보유한 사람은 826만명이다. 여섯 달 전보다 22만명 늘었다.¹ 발표 자료는 보유자를 명으로, 이용자를 계정 수로 적었다. 두 값을 나눈 비율은 그 자료에 없다.¹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은 1천만원 이상 보유 계정을 10%, 112만개로 적었다. 1억원 이상은 1.5%, 17만개다.³⁴ 시가총액 87.2조원을 계정 1,113만개로 나누면 계정당 약 783만원이다. 1백만원 미만을 가진 사람이 826만명이므로 이 평균은 실상을 보여 주지 못한다.²

250만원 공제가 걸러 내는 사람

세금은 한 해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붙는다. 백만원 미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250만원을 남기려면 자산이 세 배 넘게 올라야 한다.

다만 보유액은 특정 시점의 값이고, 이익은 한 해 동안 사고판 결과다. 보유 규모 분포만으로 과세 대상자 수를 셀 수는 없고, 그 값은 공개돼 있지 않다.

계정 수를 사람 수로 읽을 수 없다

실태조사의 1,113만개는 27개 사업자의 계정을 센 값이다. 사람을 센 값이 아니다.³ 한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두면 계정 수는 중복해서 세어진다. 과세 대상자 수를 이 값으로 가늠할 수 없다.³

언론이 과세 대상 규모를 한 거래소의 누적 회원 수로 적는 경우가 있다. 그 값도 사람 수와 다르다.³⁵

손실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

2027년에 1억원을 잃고 2028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하자. 2028년에 낸 세금은 165만원이다.^{17,18}

두 해를 합치면 손해인데 세금이 붙는다. 미국은 남은 손실을 기간 제한 없이 넘겨 댈다. 영국도 그렇게 하되 손실이 난 해가 끝난 뒤 4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³³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

세무사 김지호는 지갑 내역에 입출금 기록은 남지만 거래가 왜 이뤄졌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³⁶ 거래소는 요청하면 전체 거래 내역을 파일로 준다. 다만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둔 곳도 있다.³⁶

1백만원 미만을 가진 사람이 826만명이다. 산 값을 증명하는 일은 금액이 작다고 쉬워지지 않는다.

외제취득가액

실제로 산 값 대신 법이 정한 값을 산 값으로 보는 것이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판 금액의 50%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내가 쓰는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얼마나 오래된 것까지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각 거래소 앱이나 누리집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 적힌 조회 가능 기간

- 2 한 해 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 난 거래도 같은 해 안에서는 함께 계산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소득세법의 계산 규정. 같은 해 안의 손익은 합치고 다음 해로는 넘기지 못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팔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할 것은 없다.

5장

미뤄진 것은 소득세 하나다

이미 적용되는 것과, 아직 기준이 없는 것을 가른다.

94.5조원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2024년 보류분 · 국세청 2025년 8월 26일

6,858명

같은 해 신고 인원

개인 6,023명·법인 835개 · 같은 자료

46.4조원

해외 주식계좌를 뺀 그 밖의 계좌 신고액

같은 자료 · 한 해 전보다 5.1조원 증가

상속과 증여에는 이미 붙는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 쓸 가상자산의 값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정해져 있다. 기준일 앞뒤 각 1개월, 모두 두 달 동안의 하루 평균 가격을 다시 평균한 값이다.³⁰ 국세청은 2024년 12월 28일 이 계산에 쓸 사업자 다섯 곳을 고시했다.³⁰

상속과 증여로 받은 가상자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붙어 왔다. 미뤄진 것은 팔아서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 하나다.

해외 계좌는 5억원이 기준이다

월말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넘은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이다.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이다.³¹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붙는다.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³¹

2026년부터는 해외 신탁도 신고 대상이 됐고, 여기에는 최저 신고 금액이 없다.³¹

2025년 신고 실적은 6,858명, 94.5조원이다. 한 해 전보다 인원이 1,901명 늘어 38.3%, 금액이 29.6조원 늘어 45.6% 증가했다.³⁷

이 가운데 해외 주식계좌가 1,992명 48.1조원이다. 그 밖의 계좌는 46.4조원으로 한 해 전보다 5.1조원, 12.3% 늘었다. 가상자산만 따로 맨 값은 없다.³⁷

국세청 안내는 2025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이라고 적었다. 신고 실적에서는 가상자산계좌를 그 밖의 계좌에 넣어 함께 공표해 규모를 따로 셀 수 없다.^{31,37}

2027년에는 나라 사이에 자료가 오간다

암호화자산 정보를 나라끼리 주고받는 규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³⁸

기존 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신고와 이용자 확인을 마친다. 첫 정보교환은 2026년 거래를 대상으로 2027년에 이뤄진다.³⁸ 보고 항목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과 가상자산 종류별 거래 총액이 들어간다.³⁸

아직 기준이 없는 것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받은 자산의 과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각각의 특징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¹²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은 방향을 제시했다. 스테이킹 보상은 받은 때를 기준으로 소득으로 보자고 했다. 하드포크와 시세가 없는 에어드롭은 산 값을 0으로 두고, 팔 때 한꺼번에 매기자고 적었다. 이 내용은 제안이고 지금의 규정이 아니다.³³

<표 6> 가상자산에 붙는 세금 가운데 미뤄진 것은 하나다

세목별 적용 시점 (2026년 8월 29일 기준)

무엇에 붙나	언제부터	누구에게
팔아서 남긴 이익	2027년 1월 1일	개인

무엇에 불나	언제부터	누구에게
상속·증여로 받은 자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	개인
법인이 가진 자산	이미 적용 중	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이미 적용 중	개인·법인
체납 시 압류와 매각	2020년부터 운용	개인·법인
나라 간 정보교환	2026년 거래분부터 수집	개인·법인

주: 1) 법인이 가진 자산의 평가 방법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출렁균법이 됐고,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²⁹

2) 압류와 매각은 국세청이 2020년부터 운용해 온 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다. 매각을 위탁할 근거는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담겼다.³²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① 해외 거래소 계좌 잔액이 월말에 5억원을 넘은 달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각 해외 거래소의 월말 잔액 화면. 넘었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한다.

②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가상자산이 있으면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받은 날 앞뒤 각 1개월의 하루 평균 가격이 값을 매기는 기준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국내 거래소만 쓰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5억원을 넘은 달이 없어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하면 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12월 31일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자산의 시가를
재는 날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027년 1월 1일

거래소가 과세당국에 거래자료를 낼
의무가 생기는 날

소득세법 제164조의4제1항

5억원

해외 계좌 신고 기준 금액. 월말
잔액으로 본다

2026년 8월 기준 - 국세청

올해 안에 할 것

- 1 가입한 국내외 거래소마다 거래내역과 입출금내역을 파일로 내려받는다.
확인하는 곳 · 각 거래소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 조회 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으므로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받는다
- 2 내가 쓴 지갑 주소를 한 곳에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 출금 화면에 남은 출금 주소 옮긴 날짜와 수방을 함께
적는다
- 3 2026년 12월 31일에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화면을 저장한다.
확인하는 곳 · 각 거래소와 지갑의 보유 목록 화면. 이 날짜가 시가를 재는
기준일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 거래소만 쓰고 한 번도 출금한 적이 없으면 급하지 않다.
그 거래소가 산 값을 갖고 있다.

해외 거래소를 쓴다면 할 것

- 1 그 계좌의 잔액이 월말에 5억원을 넘은 달이 있는지 열두 달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해외 거래소의 월말 잔액. 넘었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한다

2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으로 받은 자산은 받은 날짜와 수량을 따로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거래소나 지갑의 보상 내역 화면. 과세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기록만 남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월말 잔액이 5억원을 넘은 달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잔액이 적으면 열두 달을 다 볼 필요도 없다.

거래소가 할 일

첫째, 조회 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그 기간을 화면에 적는다. 둘째, 요청하면 계정을 만든 날부터의 전체 거래내역을 한 파일로 준다. 셋째, 외부로 옮긴 거래에 그날의 시세를 함께 적어 준다. 넷째,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목록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당국이 할 일

첫째,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소득의 과세 기준을 시행 전에 공개한다.¹² 둘째, 산 값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를 고시로 정할 때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²³ 셋째, 시행 전 거래의 기록을 이용자가 갖추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둔다. 거래소가 과세당국에 자료를 내는 것은 2027년 거래분부터다.²⁵ 넷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³³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국회에 나와 있는 세 법안이다. 폐지안 한 건과 유예안 두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면 된다.¹³ 둘은 국세청 고시다. 언제 공개되는지 보면 된다. 셋은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이다. 국세청이 검토 결과를 언제 내놓는지 보면 된다.¹² 넷은 2027년에 처음 이뤄지는 나라 간 정보교환의 범위다.³⁸

연구소는 시행일이 다시 옮겨지더라도 산 값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줄지 않는다고 본다. 시행일이 미뤄졌을 때 시가를 재는 기준일도 함께 옮겨졌기 때문이다.²¹

부록 가 · 용어 풀이

기타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가상자산 소득이 여기에 들어가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총평균법

한 과세기간을 묶어 평균 단가를 한 번 내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은 거래소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계산한다.

의제취득가액

실제로 산 값 대신 법이 정한 값을 산 값으로 보는 것이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판 금액의 50%가 여기에 해당한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묶어 두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에어드롭은 값을 받지 않고 나눠 주는 것이다. 둘 다 과세 기준이 아직 없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확인한 날짜는 모두 2026년 8월 29일이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문·연혁·시행 예정 조문. 법률 제17757호, 제18578호, 제19196호, 제20615호. law.go.kr (<https://www.law.go.kr/lsRvsDocListP.do?lsid=00156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문과 조문. 대통령령 제35349호. law.go.kr (<https://www.law.go.kr/lsRvsDocListP.do?lsid=003956>)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문 목록 가운데 가상자산 평가 규정. law.go.kr (<https://www.law.go.kr/lsRvsDocListP.do?lsid=003608>)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시행 2026.2.27. law.go.kr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01445>)
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law.go.kr (<https://www.law.go.kr/DH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I=282559&type=XML&efYd=20270101&JD=009300>)
6. 국민건강보험 법령정보, 소득세법 신규대비표. nhis.or.kr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ChangeList.do?SEQ=3928&SEQ_HISTORY=25838)
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2024년 12월 28일. taxlaw.nts.go.kr (<https://taxlaw.nts.go.kr/downloadPDFFile.do?fileId=300000000001003703&fileSn=902740>)
8.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6년 3월 25일 배포.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6534>)

9.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5년 9월 30일.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5419>)
10. 국회예산정책처, 「가상자산 과세상 경쟁 및 개선방안 연구」, 2026년 8월. nabo.go.kr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load.do?fid=33319502>)
1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4년 10월. nabo.go.kr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load.do?fid=33318263>)
12.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년 1월. nabo.go.kr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load.do?fid=33317325>)
13.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결과와 주요 내용」, 2020년 12월. nabo.go.kr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load.do?fid=33316424>)
14.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mofe.go.kr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5F_000000000078809)
15. 국세청 보도자료,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2025년 8월 26일.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0136>)
16. 국세청 보도자료,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2026년 6월 4일.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2205>)
17. 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 목차와 항목까지만 확인.
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암호화자산 정보자문교환 이행규정」 제정의 주요내용, 2026년 1월 21일. bkl.co.kr (<https://www.bkl.co.kr/patent/insight/newsletter/6403>)
19. 서울경제(2026.5.7), 이데일리(2026.5.3-5.9-8.25), 더팩트(2026.8.20), 뉴스1(2026.8.11-8.28), 이투데이·뉴스스·MBN·조세일보(2026.8.10), 디지털타임스·세정일보(2026.8.28), 이코노미스트(2026.7.27), 경향신문(2026.3.1), 국세신문(2025.12.4)

각주

1.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026년 3월 25일 배포 자료. 조사대상 27개 사업자(거래소 18 개 포함 9), 기준시점 2025년 12월 31일이다. 상반기 25곳은 2025년 9월 30일 배포 자료로 확인했다. 발표 기관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2. 이 보고서 계산: 8.1조 ÷ 1,113만 = 약 73만원, 87.2조 ÷ 1,113만 = 약 783만원, 107.3 ÷ 87.2 = 1.23배, 90.0 ÷ 107.3 = 83.9%이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결과와 주요 내용」 (2020년 12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 세율로 매기고 2022년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적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연혁. 법률 제17757호 2020년 12월 29일, 제18578호 2021년 12월 8일, 제19196호 2022년 12월 31일, 제20615호 2024년 12월 31일 공포다.
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4년 10월), 1차 유예는 2022년 시행을 2023년 시행으로 옮긴 것이다.
6.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년 1월). 추징·판도 소득 과세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했다고 적었다.
7.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조제2호와 제6조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고 그날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8. 법률 제20615호 개정문. 금융투자소득을 정한 제2장의2를 삭제하면서 가상자산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옮겼다.
9.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 발표. 정부 상세본은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 유예가 없다는 점은 여러 보도와 개정문 목록으로 뒷받침한다.
10.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의 2026년 4월 29일 브리핑 발언이다. 이데일리 2026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한 곳에서 확인했다.
11.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의 2026년 5월 7일 발언이다. 서울경제 같은 날 보도에 따르면, 한 곳에서 확인했다.
12. 더팩트 2026년 8월 20일 보도에 실린 국세청 답변이다. 한 곳에서 확인했다.
13. 송언석 배지안(2026.3.1), 장성국 3년 유예안(2026.8.10), 김성훈 2년 유예안(2026.8.28). 발의 내용은 매체 두 곳 이상에서 확인했고 의안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14.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한다. 가상자산의 뜻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가져온다.
15.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다.
16.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가상자산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한다. 소득세 20%에 이 2%가 더해져 합계 22%가 된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17.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1,000\text{만원} - 250\text{만원}) \times 22\% = 165\text{만원}$ 이다.
18.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2026년 8월). 경쟁세액 산식, 다음 해 5월 신고, 손익을 합치거나 넘기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
19. 해외 주식의 기종공제 250만원은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 책자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0.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21.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027년 1월 1일 시행본 조문으로 확인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 후는 과세기간 처음의 보유분과 그 기간에 산 것의 취득가액을 더해 종수율으로 나눈 평균 단가를 쓰도록 정한다.
23. 소득세법 제37조제6항과 시행령 제88조제4.5항.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얻어 증명서류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고, 비율은 100분의 50이다.
24. 오문성 한국조세청학회 회장의 발언이다. 이데일리 2026년 5월 9일 보도에 따르면 한 곳에서 확인했다. 폐지 사실은 법률 제20615호로 확인했다.
25. 소득세법 제164조의4제1항. 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부터 두 달 뒤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낸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26.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2026년 8월). 익명성과 활동양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서술과 의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27. 이 보고서 계산. 산 값 200만원이면 $(1,000 - 200 - 250) \times 22\% = 121\text{만원}$, 700만원이면 11만원, 900만원이면 0원이다. 증명하지 못하면 $(1,000 - 500 - 250) \times 22\% = 55\text{만원}$ 이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문. 대통령령 제35349호(2025년 2월 28일 공포)가 제88조제1항에 거주자별 총평균법을 넣었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29.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대통령령 제36130호(2026년 2월 27일)가 선입선출법을 총평균법으로 바꿨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 이 항은 2022년 1월 1일 시행이다. 고시는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2024년 12월 28일)이고 사업자는 다섯 곳이다.
31. 국세청 보도청고자료(2026년 6월 4일). 5억원 기준, 6월 30일 기한, 과태료 10%, 50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과 영단공개, 해외 신탁 포함이 적혀 있다.
32. 강제징수 업무 처리 요령 운용은 경합신문 2026년 3월 1일 보도. 해당 위탁 근거는 국세신문 2025년 12월 4일 보도에 따른다. 각각 한 곳에서 확인했다.
33.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2026년 8월). 나라별 비교, 일본의 5% 규정과 2025년 12월 세제개정대강, 거래유형별 판단 방향, 개선방안이 실려 있다. 판단 방향과 개선방안은 제안이다.
34.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이 금융정보분석원 실태조사를 출처로 밝히 인용한 것이다. 1천만원 이상 10%와 1억원 이상 1.5%는 원 발표자료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35. 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보도. 기사가 근거를 2025년 12월 기준 한 거래소의 누적 확인 수라고 밝혔다. 한 곳에서 확인했다.
36. 김지호 세움텍스 세무사의 발언이다. 이코노미스트 2026년 7월 27일 인터뷰에 따른다. 한 곳에서 확인했다.
37. 국세청 보도청고자료(2025년 8월 26일). 6,856명 94.5조원, 전년 대비 1,901명 29.6조원 증가, 해외 주식계좌 1,992명 48.1조원, 그 밖의 계좌 46.4조원이다. 가상자산만 따로 뺀 값은 없다.
3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이 암호화자산 거래를 정기 정보교환 대상으로 정한다. 이행규정의 시행일과 기한, 보고 항목은 법무법인 태평양 2026년 1월 21일 자료에 따르면, 한 곳에서 확인했다.



제목	과세는 세 번 미뤄졌고 얼마에 샀는지는 각자 증명한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70· NEXUS Research 2026_70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8월 29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과세는 세 번 미뤄졌고 얼마에 샀는지는 각자 증명한다」, 넥서스 리서치 2026_70 2026.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세금 신고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